

▣ 박근종 칼럼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해선 좀비기업 걸러내고 우량 기업으로 채워야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인 일명 '좀비기업'의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Delisting)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통해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혁신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집중 관리 기간 운영,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절차 효율화 등 4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부실기업이 연명하는 경우 전반적인 시장 신뢰를 저해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어 심각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惹起)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함이다.

주요 핵심 골자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단장 : 코스닥본부 담당 부이사장)을 구성하고 2026년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집중 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기존 코스닥본부 상장폐지 심사 3개 팀에, 지난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2025년 12월)의 후속 조치로 급주(2026년 2월 9일) 추가 신설된 1개 팀을 더해 총 4개 팀 20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신속히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한 차례 강화되었고, 2027년 1월 1일 200억 원, 2028년 1월 1일 300억 원으로 추가 상향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동 상향조정 주기를 매 반기로 조기화한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 200억 원으로, 2027년 1월 1일 300억 원으로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된다. 아울러 일시적 주가 피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하회 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현재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반기 기준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한다. 다만,

사업연도 말 기준은 해당 시 즉시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무엇보다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 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 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 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상장폐지 심사 시 절차도 보다도 효율화한다. 작년 제도개선을 통해 코스닥 실질 심사 시 기업에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키를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했다.

이에 더해 올해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추가 축소한다. 또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가처분 소송 시 인용(거래소 패소)되는 경우는 적으나, 사건 증가 시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최종 퇴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반영하면 현 시점에서 올해 중 코스닥(KOSDAQ)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당초에 예상했던 50개 사(社)보다 100여 개 늘어난 약 150개 사 내외(100~220개 사)로 최대 220개 부실기업을 퇴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4년 20개, 2025년 38개와 비교하면 가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퇴출 기업 주주들의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한국 증시 '밸류-업(Value-up | 기업가치 제고)'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 과정이다. 코스닥시장의 해묵은 고질병은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다.

지난 20년 동안 코스닥시장에 1,353개 기업이 새로 상장했지만 퇴출은 415개에 불과한 탓에 문제 기업이 적체되고 있다고 보고 부실기업 정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에 시가총액은 8.6배 늘었으나 지수는 겨우 1.6배 상승했을 뿐이다. 부실기업들이 시장에 쌓이면서 전체 평가를 끌어내린 셈이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정반대 상황이다. 매년 1,000개 이상의 기업이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구조다. 나스닥(NASDAQ)만 따져도 2023년 신규 상장(154개)의 5.16배에 이르는 796개 종목이 상장폐지됐다. 나스닥에서는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이의신청 기간을 포함해도 최대 540일 안에 퇴출이 완료된다.

반면 코스닥은 소송과 재심사로 퇴출에 3~4년이 걸리기도 한다. 부실기업의 문제는 단순히 지수 하락에 그치지 않는다. 혁신기업으로 가야 할 자본과 인력을 좀비기업이 쓰게 된다. 그 결과는 당연히 시장 전체의 자원 배분이 왜곡

될 수밖에 없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좀비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우량기업의 고용과 투자마저 위축된다고 한다. 부실기업을 방치하면 산업 전체가 함께 가라앉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도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향후 상장폐지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시가총액 기준을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도 퇴출 요건에 추가했다. 이런 동전주는 주가가 수백 원에 그쳐 변동성이 크고 시가총액이 작아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다.

투자자 반발을 우려해 부실기업을 온존(溫存)시키는 구각(舊習)과 관행(慣行)으로부터 과감히 결별해야만 한다. 진정한 밸류-업은 주주환원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좀비기업을 걸러내고, 그 빈자리를 미래 기술을 가진 우량 기업으로 채우는 선순환 구조가 절실하다. 엄격한 퇴출 기준은 "주식 시장의 상장사는 최소한의 건전성이 보증된다."

"라는 신호가 된다.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엄격한 잣대의 하나인 감사보고서를 통해 증권시장에서 상장 유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사업(반기)보고서 미제출, 감사 의견 부적절, 영업정지, 부도 발생, 자본잠식 등이 상장폐지 사유다.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 해당 기업은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15영업일이 추가로 주어진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거래처가 되며, 대상에 해당되면 심사가 진행된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부적절,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에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기에 투자자들에게는 보다 심각한 경고메시지가 된다. 이와 같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해당기업은 15영업일 이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결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후 거래일 기준 45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퇴출을 시키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 사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최대 220개 기업 퇴출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무늬만 상장사'를 일거에 털어내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이번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은 코스닥의 시

장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SNS를 통해 증시를 '백화점'에 비유하며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라고 지적한 직후 대책이 나온 것이다. 이른바 '오전교, 천스닥' 기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수 부양보다 증시 자체의 신뢰를 높이는 일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실제 코스닥은 벤처의 산실을 목표로 1996년 출범을 하긴 했지만, 현재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상장기업 수는 1,800개로 코스피(KOSPI)의 2배에 달하지만, 시가총액은 5분의 1에 불과하다.

운동장을 뛰는 선수의 수만 늘어났을 뿐 선수들의 체력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어지면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형국이다.

결국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선 좀비기업을 걸러내고 그 자리에 우량 기업으로 채워야만 한다.

무엇보다 감사 의견이 거절될 정도로 부실한 기업이 늘어나면서 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정보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도 적지 않다. 이는 코스닥의 고질적 약점도 기업 펀더멘털(Fundamental | 기초 체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보니 투자자들은 합리적 가치 평가 대신 단기 재료에 따라 위험이 따르는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마저 재값을 인정받지 못한 채 시장 전체가 만성적인 저평가에 머무르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코스닥의 모델 격인 미국 나스닥은 1996년 이후 지수가 약 18배나 급등했다. 엔비디아(NVIDIA), 애플(Apple), 테슬라(TESLA) 등 굴지의 혁신기업에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그 영향으로 기업가치가 오르고 투자가 더욱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었다.

단기 매매에 주가가 등락을 거듭거듭 반복하는 코스닥시장과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코스닥이 '한국판 나스닥'으로 도약하고 비상하려면 부실기업 퇴출만으로는 매우 부족해 보인다. 진입과 퇴출이 원활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공시 투명성 강화, ▷회계·지배구조 개선, ▷기술기업에 대한 장기자금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수술이 급선무(急先務)다. 투자자가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신뢰가 차곡차곡 쌓일 때만이 비로소 혁신과 성장의 선순환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공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서울시, '글로벌 MICE 허브도시' 리더십

확장... 경북과 11번째 상생 파트너십 체결

2월 23일(월), 서울시와 경상북도「MICE 공동마케팅 상호

교류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글로벌 유치 경쟁력 극대화

11년 연속 '최고의 MICE 도시'로 선정되며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한 서울시가 경상북도와 손잡고 MICE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MICE 유치 기반 확대와 지역 상생을 위해 올해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협력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경상북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을 위한 4차 업무협약(MOU)을 2월 23일(월) 14시, 서울시 장에서의 유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MICE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경상북도와의 협약은 11번째 사례다. 특히 경상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 행사 운영 역량과 MICE 개최지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서울의 축적된 MICE 산업 경험과 경북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결합해 고부가가치 MICE 단체 유치를 시너지 낼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외 MICE 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 개최, 글로벌 MICE 전문 매체 공동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경북 연계 방문 MICE 단체를 공동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MICE 산업

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올해부터 원거리 지자체 방문을 장려하기 위해, PLUS CITIES 우수 여행사가 경북을 포함한 7개 지자체를 방문할 경우 특별지원금 100만 원을 제공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서울컨벤션부로 홈페이지(http://korean.miceseou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 마이스 전시회에서 지역 상생 마이스 협의체이자 공동마케팅 브랜드 '플러스 시티즈(PLUS CITIES)'를 내세워 각 시도의 문화·관광 자원을 전 세계 MICE 관계자에게 소개하며 공동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MICE 도시의 경쟁력은 지역 고유의 매력과 차별화된 경험에서 비롯된다"며, "글로벌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도시인 서울의 MICE 역량과 경북의 특화 자원을 연계해 글로벌 시장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간 고유 가치를 하나로 엮는 상생 모델을 발전시키고, MICE 유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플러스 시티즈 파트너십을 통해 작년 10개 지자체와 함께 4,500명 이상의 외국인 마이스 방문객을 유치했다"며 "올해는 특히 연초부터 서울-지자체 연계 방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 마이스 협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과 경상북도가 글로벌 MICE 개최지로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국비지원 사업 2건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문화예술회관은 2026년 공연예술 분야 주요 국비 지원사업 2건에 선정돼 총 2억 9천 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1억 5천 만 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1억 4천 만 원)이다.

문화예술회관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 예술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 인천의 대표 공연장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의 신작 <개항장 속으로 들어간 광대들>을 10월 소공연장에서 선보인다. 회관은 이를 통해 지역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공연장 운영과 지역 예술가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협력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단위 우수 공연을 유치한다. ▲양방인 <Evolution> (10월/대공연장), ▲연극 <내일은 내일의 개> (11월/소공연장),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11월/소공연장)가 각각 공연된다. 장르와 규모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시민들의 공연 선택 폭을 넓히고, 연중 공연 밀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공연 콘텐츠 유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예술단체의 지속 가능한 창작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공연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균형 있고 완성도 높은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람객 650만명 시대 연 국중박...유홍준 "제2 상설전시관 필요"

관훈포럼서 발표... "박물관 유료화, 예약제 개발·시범운영 후 결정"

"성수기에 1일 최대 수용인원 배 이상 입장"...부관장 도입 필요성도

"대중과 긴밀히 만나는 인문학 저서 적어... 'K-폴리처싱' 생겨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최근 박물관의 위상과 관람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관람객 650만명 시대를 연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국립 박물관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홍준 관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실 제2관 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용산으로 이전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 전시관과 2곳의 특별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설 전시관은 총 7개 관과 39개 실로 나뉘 유물 9천800여 점을 전시하며 2008년 5월부터 무료로 운영 중이다.

유 관장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시설과 조직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힘줘 말



했다. 그는 "현재 전시 공간은 연간 관람객 200만명을 목표로 한 것으로, 1일 최대 수용인원을 1만5천명으로 잡은 것"이

라며 "성수기에는 4만명 넘게 입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관장은 조직 차원에서는 부관장 직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부관장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도 사안을 공감하고 있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 관장은 박물관 유료화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기본적인 입장은 관람객의 과밀집을 막기 위해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박물관 재정 지원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유료화는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예약제, 패스트 트랙 등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지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박물관은 관람객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고객정보통합관리(CRM)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예약·예매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유 관장은 유료화 시점과 방법과 관련해서 말을 아끼며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을 거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www.thesegeye.com 7차재보: news@thesegeye.com
	● 회장 이채봉 ● 발행인 심규영 ● 편집인 이채봉 ● 편집국장 이장성 ● 마케팅본부장 이현진 ● 인쇄인 디엠코리아(주)
● 편집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2길 13층 (남신빌딩)	
편집국/기사재보 : 1661-8385 광고국 : 02)717-7272 FAX : 02)717-7273	등록 : 2007년 3월 22일 창간: 4월23일 등록번호 : 서울 가 50106 구독료 : 한달 15,000원 한부1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